

#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(요약)

2025. 9. 30.



대통령직속  
지방시대위원회

# 순 서

I. 추진경과 및 배경	1
II. 추진목표 및 전략	3
III.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으로 변화된 모습	4
IV. 추진방안(요약)	5
1. 5극3특 경제권 : 성장과 집중	5
2. 5극3특 생활권 : 연결과 확산	8
3. 5극3특 추진기반 : 행·재정기반 구축	10
〈참고 1〉 주요과제 추진 체계도	11
1. 국토공간 재설계	11
2. 5극3특 전략산업 육성 시범프로젝트(예시)	12
3.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인재양성(예시)	13
4. 초광역권 대중교통망 계획(예시)	14

- 국민주권정부 출범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방향·목표·과제의 종합적 틀인 『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\*』 수립해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에 상정

\* 지방시대위원회는 법정 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(‘23~’27년)에 △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, △시·도 지방시대 계획, △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였으며,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.

⇒ 새정부 출범과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 대두

- 지방위내 기획단을 5극3특 전략추진TF 설치하고, 국정기획위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5극3특 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\*(7.23~)해 내용 마련

\* 5극3특 특위(위원장 이병헌 교수, 20여명)는 전체회의 6회 및 30여회 분과회의,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전략, 핵심과제, 액션플랜 등 ‘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(안)’ 마련

- 국정기획위, 대통령정책실, 기재부·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전례 없는 속도로 국가균형성장 위한 제반 여건 마련 성과 도출

- 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 부여, 초광역특별계정 신설, 포괄보조금 대폭 확대 (‘25년 3.8 → ’26년 10.6조원), 지방 우대정책(55개 과제) 추진 등 재정전략 마련

\* 8.13 국정위 국민보고대회, 8.14 경제장관회의

- 지역 성장엔진 집중지원, 지역투자 촉진 방안, 지역 격차해소 지원방안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

\* 새정부 경제성장전략(8.22), 26년 정부예산안(8.26) 등

- 산업부, AI수석실 등과 5극3특 권역별 시범 프로젝트 추진 협의(‘25.8)

- 지방위 설계도(안)을 기초로 분야별 관계부처· 시도 실무협의(7회), 위원장 주재 11개 관계부처 실국장협의(9.3)를 거쳐 국무회의 토의안건 상정(9.16)

- 국무회의 토의시 논의된 사항을 추가하여 관계부처 회람 후 지방시대위 1차 회의 상정 예정(9.30)

## ※ [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 추진 의미]

- ① (국정과제 실천방안) 국정과제 중 중점과제 10번 ‘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’에 대한 실천방안으로, 경제·생활·행재정 3대분야 11개 전략과제, 144개 세부과제를 마련
  - 이는 그동안 범부처 차원 종합 실행계획 없이 추진되었던 균형성장 전략을 국정기획위, 대통령정책실 및 기재부·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총괄·체계화한 결과물임
- ② (5극3특 기반 총괄 조정) 부처별로 흩어져 개별·경쟁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들을 5극3특 권역의 경제·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종합화하고, 경제권·생활권·행재정으로 범주화·구체화한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의 성과 도출
  - (경제권) 권역 단위로 경계 확장을 통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↔ 인재양성 ↔ 산·학·연 혁신거점 조성 삼각 축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
  - (생활권)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(60분 생활권)을 중심축으로 주거·교육·의료·문화·관광 등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 강화
  - (행재정) 권역 단위 행정체계의 구축 지원과 제도화, 초광역특별계정·초광역협약·지방우대 지원 강화를 통해 균형성장 위한 확고한 지방우대 기조를 정립하고 5극3특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
- ③ (새로운 국가균형성장 패러다임 제시)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의제를 5극3특 전략 틀 안에서 재편하고, 쟁점을 관계부처와 조정·합의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패러다임을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실천방안으로 확립

비전

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

목표

잠재성장률 3%+, 비수도권 GRDP 50%+

3대 분야, 11개 전략과제, 144개 세부과제

1 5극3특 경제권: 성장과 집중

기업이 투자하고  
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

1. 5극3특 성장엔진 육성
2.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
3.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
4.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
5. 5극3특 산·학·연 혁신성장거점 조성

2 5극3특 생활권: 연결과 확산

편리하게 오가고,  
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

6. 국토공간 재설계
7.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망 강화
8. 주거·의료·복지 등 통합연계망 강화
9. K-농산어촌 조성

전략과제

3 행·재정기반 구축

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

행정기반

- 5극3특 권역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
- 특별지방자치단체 강화
- 5극3특 권역별 특별 협약 활성화

재정기반

- 지방 재정 확대
- 5극3특 권역별 재정체계 구축
-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

추진기반

정책프레임 전환

균형분산 → 권역 거점중심 + 네트워크 연계

규모의 확장

시·도 단위 → 5극3특 권역단위

경쟁력 유지 임계규모 내재화

인구·기업·R&D·교통망 → 패키지화

추진전략

< 이재명정부 국가균형성장에서 달라지는 점 >

구분	이전정부	이재명정부
①지방의 위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불균형 성장 피해 → 수혜의 대상</li> <li>▪ 형평성 차원 지원대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역 자율형 성장모델</li> <li>▪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성장엔진</li> </ul>
②국토공간 재설계 (생활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수도권 중심축으로 한 교통망 체계</li> <li>▪ 16개 행정단위 및 교통공간 구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권역 단위 국토공간계획</li> <li>▪ 권역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성장 임계점 달성 가능 (네트워크 효과 극대화)</li> </ul>
③전략산업 육성 (경제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하향식(Top-Down) 기획방식</li> <li>▪ 중앙부처 선정 → 지방정부 실행</li> <li>▪ 시·도 단위 전략산업 선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상향식(Bottom-Up) 기획방식</li> <li>▪ 지역기반 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산업 선정 (지역자율형 성장모델) - 권역 단위, 규모의 경제효과</li> </ul>
④부처-지방 정부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수직적 수여자-수혜자 관계 형성</li> <li>▪ 상시적 소통채널 부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범정부+지방위+권역(수평적관계)</li> <li>▪ 초광역특별협약 활성화로 상시 소통 채널 구축</li> </ul>
⑤정책·사업 추진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일률적 기준, 균등 분담</li> <li>▪ 부처별 칸막이식 사업추진 (산업·교통·인재육성·R&amp;D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각종지원의 패키지화(성장 5종 세트)</li> <li>▪ 통합공모, 다부처 묶음 사업 추진</li> </ul>
⑥행정체계 개편 및 권한이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17개 시도별 정책 추진</li> <li>▪ 지방정부 권한 이양 부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특자체 설립·운영 활성화</li> <li>▪ 권역에 산업·교통·인재육성·R&amp;D 등의 권한 이양</li> </ul>
⑦재정체제 개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중앙주도의 재정배분</li> <li>▪ 권역 단위 지원 목적 계정 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포괄보조 대폭확대, 예산 사전조정권 강화</li> <li>▪ 초광역특별계정 신설</li> </ul>

◇ **균등분산→권역거점 중심, 시도 단위→권역단위의 경계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,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**

### ① (5극3특 성장엔진 육성 : 3개 추진과제)

①5극3특 권역 단위 앵커기업 기반 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

②5극3특 성장 5종세트 패키지 지원 ③지방투자유인 기반제도 개선

○ 중앙-지방 협력을 통해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5극3특 권역별로 미래 성장동력이 될 '5극3특 성장엔진' 선정\*

\* 권역간 업종 차별화 또는 최소한 동일업종 내 세부업종 차별화 원칙 下, 권역별 산업 기반·성장 가능성·기업투자 가능성 등 종합 고려

○ '5극3특 성장 5종세트\*' 패키지 지원방안 마련 및 초광역특별협약\*\*을 통한 범정부적·지속적 지원

\* ①인재양성, ②강력한 규제완화, ③혁신지원패키지(R&D·인프라) ④재정지원, ⑤펀드지원

\*\* 초광역특별협약(현, 지역발전투자협약)으로 다부처-특별광역연합-앵커기업 간 협약

○ 지투보조금 규모·한도 확대 등 지방투자 유인강화\*

\* 지투보조금 규모·한도 확대('25년 2,251억원 → '26년 2,553억원, 한도 200→300억원<sup>균형발전하위지역</sup>,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·재정·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강화

### ② (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: 4개 추진과제)

①권역별 지역주력산업 공정혁신 지원 ②지역산업 AX 생태계 강화

③중소·중견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특화단지 연계강화

④권역별 관광 인프라·콘텐츠 구축

○ 광주·대구·전북·경남 4대 권역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AX 연구·실증 거점 우선 조성 및 권역별 TechHub 조성\* 추진

\* (TechHub) 미국의 '메뉴팩처링USA'에서 첨단산업 집적지 인근에 산학연 연계거점(장비지원, 실증거점)을 설치하고, 산업현장의 혁신생태계 강화 지원

○ 지역 AX선도기업(예, LG엑사원)의 AX 상생모델 구축\* 및 AX자원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, 지역 AX 공급기업 육성\*\*

\* (25년) 중기부-LG전자-경남 협업, 자체 LLM(엑사원) 활용 상생형 AI공장 구축(80억) → (26년) 타 지역 및 기업으로 확대(200억)

\*\*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추진: 기술력 있는 AX 공급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, 맞춤형 지원

○ 지역 중소·중견기업 사업재편 컨설팅 및 재편시 인센티브\*를 확대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특화단지 연계로 시너지 창출 추진

\*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사항(▲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, ▲양도차익 과세이연, ▲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, ▲정부 기술개발(R&D) 사업 참여 우대)

○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한 K-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신설\* 및 주요 교통 거점에서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 개선

\* 범부처 관광통합 지원체계 가칭K-지역관광 TF 구축, 통합상품 개발+홍보·마케팅+AI 혁신 관광서비스·체험+역내교통+인력양성 등 통합지원

### ③ (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 : 2개 추진과제)

①정부주도 펀드의 지역투자 확대 ②권역권별 가칭지역투자공사 설립

○ 비수도권 중심의 투자재원 확대\* 및 권역별 지역성장펀드 조성

\* 국민성장펀드(150조원) 조성 및 벤처투자시장 확대(40조원) 후 40% 수준을 지역에 투입 (금융위/중기부)

○ 권역별 가칭지역투자공사 설립\*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금융사업 및 첨단전략산업, 벤처·스타트업, 주력산업 등 지원

\* 일부 권역 우선 설립 및 시범 운용 후 권역별 확산 검토

### ④ (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 : 3개 추진과제)

①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및 라이즈 체계 재구조화

②지역산업과 연계한 투트랙(첨단 기술인재·지역 특화 실무인재) 인재 양성 체계 구축

③지역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-취·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

-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**서울대 10개 만들기\***, **라이즈(RISE) 체계 재구조화**를 통해 지역인재 양성 체계 개편 및 **초광역 인재 양성 사업\*\*** 추진
  - \* 산업분야 추진과제 확정과 연계해 권역별 인재양성 추진 / ('26) 3교 우선 추진 → ('27~) 단계적 확대 / 서울대 10개 만들기 로드맵 마련(~'25)
  - \*\* (메가공유대학) 지역 거점대 중심 공동 교육과정 개발·운영, 인프라 공유 등, (산학연 클러스터 연계) 산학연협력단지, 캠퍼스 혁신파크, 산학융합지구 등 연계로 기업참여 활성화, 공동 R&D 등, (취업) 대학-산업체 간 계약학과·계약정원제 설치·운영 등, (창업) 대학 중심 창업경제권(정부·지자체·기관 등 네트워크) 공동 창업 지원 등
- **탄력적 학사제도\*** 운영, **해외 우수인재 유치(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)\*\***, **직업계고-(전문)대학-기업 간 연계**를 통해 지역 맞춤형 **첨단기술/실무인재 양성**
  - \* 가칭 산업학위제(산업계 실무형 인재양성), 사내대학원 설치, 대학-기업 공동운영 계약학과·계약정원제 설치
  - \*\* 외국대학 교원 국내 임용 시 외국대학 겸직 근거 마련 해외 우수 인재 유치(인건비연구비가자재 패키지 지원 등)
- **초·중등 단계 유연한 학교 체계\*** 구축, **라이즈 체계를 통한 지산학연 협업 강화**, **대학 중심 취·창업 플랫폼 육성\*\***을 통한 지역인재 **정주 선순환 생태계 조성**
  - \* 농어촌학교 대상 교육프로그램 다변화·내실화 / 자율형 공립고 2.0 확산 및 운영 내실화 지원
  - \*\* 대학 내 학교기업 강화, 대학 창업펀드 지원

## 5 (5극3특 산·학·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 : 3개 추진과제)

- ① 권역 내 산·학·연 혁신성장거점도시(職·住·樂 일체) 조성
- ② 산·학·연 혁신성장거점도시와 연계된 복수의 거점도시 조성
- ③ 부처별 거점조성사업 평가 및 재설계

- 판교 혁신클러스터에 상응하는 세계적 수준의 산·학·연 융합 혁신생태계를 권역별 구축
  - \* 국토부 '캠퍼스 혁신파크' 및 '도심융합특구', 산업부 '산학융합지구', 중기부 '지역거점 창업도시', 과기부 '연구개발 특구' 등 혁신공간과 혁신사업 연계 필요
- 권역 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해 **특성화된 거점도시를 복수로 육성**, 성장동력 확산
- 권역별 산·학·연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**부처별 유관사업 평가**를 통해 **구조개편 및 재설계**

◇ 시도 단위→5극3특 권역별거점 중심축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, 인구·기업·R&D·교통망 패키지와 지원으로 생활권 연계와 확산

### ① (국토공간 재설계 : 1개 추진과제)

#### ①5극3특 권역별 체계로 국토공간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

- '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'26~'40)'을 통해 5극3특 경제·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, 거점도시권 육성전략 제시
  -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,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거점 강화

### ② (5극3특 권역별 60분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망 강화 : 4개 추진과제)

- ①계획-투자-운영 일원화를 위한 권역별 교통계획체계 정비
- ②생활권 연결 제고 위한 대중교통 확충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
- ③(단기)대중교통망 + (중장기)철도·도로망 구축으로 권역별 연결성 강화
- ④5극3특 통합 환승체계 강화

-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 위한 대중교통망계획\*을 수립, 광역교통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간선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서비스 강화
  - \* 초광역권계획(「국토기본법」), 초광역권발전계획(「지방자치분권」) 등 기존 계획체계 활용 검토
- 비수도권 광역버스망(M-bus, BRT)을 확충\*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, 농어촌 맞춤형 DRT 사업 확대하여 생활권 내 이동 지원
  - \* 제2차 BRT종합계획 수립('26.6)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사각 지역에 BRT 도입
- 부산~양산~울산, 용문~홍천 등 권역 내 거점도시를 광역철도로 연결하여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정비
  - \* 지역 특성상 빠른 이동서비스 필요시 GTX급(최대 180km/h) 광역급행철도(x-TX) 병행
- 전국 주요 거점 내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(K-MaaS) 활성화 등 스마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

### 3 (주거·의료·복지 등 통합연계망 강화 : 4개 추진과제)

①지역 주거·문화여건 개선 ②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협력 강화  
③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④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여건 조성

- 생활권 단위로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(지역활력타운 등) 및 권역별 문화거점 조성(문화거점도시, 문화선도산단 등)으로 지역 주거·문화여건 개선
- 권역별 거점병원을 집중 육성하고, (중앙)국립중앙의료원-(권역)국립대병원-(지역)지방의료원·보건소간 협력체계 구축, 지역 중증·응급질환 24시간 대응체계 마련
  - \* 국립대병원 24시간 진료체계 지원('26년 126억원),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권역·지역별 책임의료기관과의 수련·임상협력, 국립대병원-민간병원 연계로 필수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
- 지자체 주도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·장애인 등에게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를 연계·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('26.3월 전국 시행)
- 교육규제 합리화를 위한 교육특구 지정·운영, 초·중 통합학교 운영,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체제 조성

### 4 (K-농산어촌 조성 : 4개 추진과제)

①농어촌주민 기본소득 보장 ②머물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  
③청년 농어업인재 육성 및 귀농·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  
④K-푸드, 스마트농업,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등 新산업 육성

- 농어촌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서 '햇빛연금' 조성('25~'26, 햇빛 소득마을 100개소) 및 인구소멸위기 지역 중심으로 '농어촌기본소득제' 도입 추진
- 머물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('26, 139개) 및 빈집관리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재생 프로젝트 추진
- 예비농업인 컨설팅·교육 도입 및 청년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영농·영어 정착지원금 지원 확대
- 지역 특산품을 수출 유망상품으로 육성하고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단위 K-푸드플랜 수립

◇ 5극3특 권역별 행정체계 구축·제도화, 예산편성 사전 조정권 강화, '초광역특별 계정' 신설 등을 통해 5극3특 전략의 신속·효과적 추진 뒷받침

### ① (5극3특 행정기반 구축 : 5개 추진과제)

① 5극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②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③ 초광역 특별협약활성화 ④ 통합공모 등 공모제도 개선 ⑤ 권역 중심 맞춤형 권한이양

-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실행력 제고를 위한 5극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\*
  - \*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운영, 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, 초광역특별협약추진체 구성
- 실질적인 5극3특 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권한 강화 및 지역 주도 출범 지원
  - \* 사무이양 근거마련,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 행정·재정 권한 확보(법령개정사항)
- 부처별 사업을 패키지화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특별협약\* 활성화
  - \* (기존) A부처→a/b/c 지자체 ⇒ (협약방식) A/B/C부처+지방위+초광역권→초광역권
- 복합타운(주거-일자리-생활SOC 등) 등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 도입
- 5극3특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이양\* 추진
  - \* 광역교통 등 종합계획, 특행기관 등 권역 단위 지원사무 발굴 및 3차 일괄이양 등

### ② (5극3특 재정기반 구축 : 4개 추진과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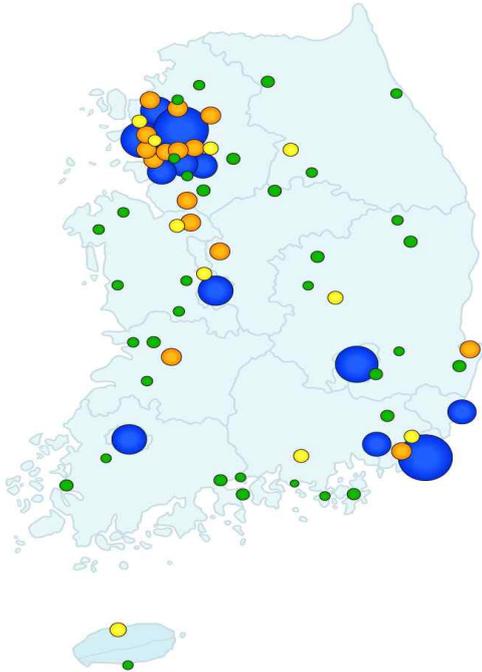
① 지방우대 및 지방재정 확대 ② 5극3특 지원 재정체계 구축  
③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④ 지방우대 재정지원

- 정책·사업의 균형성장 영향을 종합평가해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「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」 도입 및 지방시대위 예산 사전조정권\* 강화
  - \* 현행 특별법은 '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·조정·배분하여야 한다'로 규정 → 개정안(예) : 기재부 및 과기부 장관은 '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'
- 5극3특 관련 '초광역특별계정' 신설(특별법 제76조 등 개정 필요)
  - \* 현행 지특의 자율+지원 계정 → 자율+지원+초광역특별계정 체계로 변경
- 지특회계 포괄포조 대폭 확대('25년 3.8조원 → '26년 10.6조원) 및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예산지원('26년 50억원),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 검토
  - \* 현재 국세-지방세 비율 75:25 수준,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('05년 56.2% → '15년 50.6% → '25년 48.6%)
-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우대 방안 강구

1. 국토공간 재설계

# 국토공간 재설계

## 현재 도시 분포



## 5급 3특 내 도시권



## 5급3특 권역 내 공간구조



## 2. 5극3특 전략산업 육성 시범프로젝트(예시)

# 부울경 제조 AI혁신 생태계 조성

- SK·AWS AIDC 중심으로 -

패키지

1 /

### 재정 및 세제

- 고성능 컴퓨팅(GPU, NPU)지원 ('25. 198억원)
- 지역거점 창업도시 조성 (~'30. 전국 10개)
- 지방이전기업 소득·법인세 감면 확대(기간, 예산)
-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(기간, 대상)

패키지

2 /

### R&D

- **경남** 제조현장 DATA 기반 피지컬 AI 개발 및 실증 ('26~'30. 1조원(국비+민자))
- **부울경** 지역자율 R&D 본격도입 ('26 4극별 131억원 3특별 88억 원)
- R&D 결과물 혁신 조달·구매 연계 추진

패키지

3 /

### 규제 (기업요청사항)

- 메가 샌드박스
- **울산** 분산에너지특구
- 전력구매계약 허용(LNG PPA)

패키지

4 /

### 펀드

- **동남권** 투자공사 ('26 설립추진),
- 국민성장펀드('26~'30, 150조원 + α) 비수도권 비율 확대 (40% ↑)
- 4극 3특 권역별 지역성장펀드 조성 (~'30, 3.5조 원)

### 울산

## SK-AWS AIDC(7.5조투자)

↑ 전략적 제휴 (데이터교류, 피지컬 AI 기술개발, 창업지원)

LGCNS · 삼성SDS 등 국내 AI솔루션 기업

패키지

5 /

### 인재양성

- 거점국립대 제조 AI 특성화 단과대학 ('26~'28 간 3,000억원)
- **부산대·경상대·창원대·UNIST** 출연연·기업 연계 제조AX 특화 인력양성
- 대학·기업 공동운영 계약학과·계약정원제 설치

## 초광역특별협약

기  
대  
효  
과

부울경 AX 일자리 창출  
지역인재 정착

부울경 AX 솔루션  
창업 생태계 조성

부울경 주력산업 AX 전환

AX 솔루션기업  
글로벌 시장 진출

### 3.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인재양성(예시)

## 광주전남권 AI·에너지 융합 인재양성

### AI·에너지 융합 산업분야 (광주전남권 성장엔진)

#### 학 대학

**전남대학교** (거점국립대)  
AI·에너지 특성화 대학원-학부 집중 육성  
↕ 대학 간 자원 공유·협력  
**GIST, 한전공대** 등 권역 내 우수대학

#### 研 연구기관

**광주** 국가 AI데이터센터  
**광주전남** (출연)연구기관  
광주 에너지기술연구원  
한국 광기술원  
전남 생산기술연구원 등

#### 産 기업

한국전력  
NHN 클라우드  
EMS, 데이터플라이  
RE100 산단 연계투자 앵커기업

#### 창업 생태계 지원

스타트업파크  
지역거점 창업중심대(**전남대**)  
딥테크 창업중심대(**GIST**)  
엔젤투자허브(**호남권**)  
TIPS(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)  
**광주/전남** 지역성장펀드

기대  
효과

AI·에너지 융합 우수인재 양성  
+  
권역 내 취업/창업 활성화

#### 4. 초광역권 대중교통망 계획 (예시)

## 충청권 초광역 대중교통망

### 권역 내 연결 강화

#### 대도시권 ↔ 거점도시

광역 내 도시철도망 (CTX+@)  
광역 내 급행버스(BRT, M-BUS 등)

### 교통불편 해소

#### 중소도시/농산어촌 ↔ 대도시권/거점도시

농촌형 DRT(행복버스, 100원택시 등)



### 통합환승체계 강화

통합요금제, 환승할인, 정기권, 디지털 플랫폼  
→ 교통비용 부담 절감 및 이용편의 향상

**기대  
효과**

**60분 생활권 + 교통불편 해소 + 비용절감 + 관광산업 활성화**

---

#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안

---

2025. 9. 30.



대통령직속  
지방시대위원회

# 순 서

I. 추진경과	17
II. 추진배경	19
III. 추진목표 및 전략	21
IV. 핵심 추진전략 1	22
<5극3특 경제권 : 성장과 집중>	
V. 핵심 추진전략 2	33
<5극3특 생활권 : 연결과 확산>	
VI. 핵심 추진전략 3	41
<5극3특 추진기반 : 행·재정기반구축>	

- 국민주권정부 출범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방향·목표·과제의 종합적 틀인 『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도\*』 수립해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에 상정

\* 지방시대위원회는 법정 계획인 지방시대종합계획(‘23~’27년)에 △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, △시·도 지방시대 계획, △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였으며,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음.

⇒ 새정부 출범과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균형성장을 위한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 대두

- 지방위내 기획단을 5극3특 전략추진TF 설치하고, 국정기획위 위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5극3특 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\*(7.23~)해 내용 마련

\* 5극3특 특위(위원장 이병헌 교수, 20여명)는 전체회의 6회 및 30여회 분과회의, 관계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전략, 핵심과제, 액션플랜 등 ‘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(안)’ 마련

- 국정기획위, 대통령정책실, 기재부·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전례 없는 속도로 국가균형성장 위한 제반 여건 마련 성과 도출

■ 지특회계 예산 사전조정권 부여, 초광역특별계정 신설, 포괄보조금 대폭 확대 (‘25년 3.8 → ’26년 10.6조원), 지방 우대정책(55개 과제) 추진 등 재정전략 마련

\* 8.13 국정위 국민보고대회, 8.14 경제장관회의

■ 지역 성장엔진 집중지원, 지역투자 촉진 방안, 지역 격차해소 지원방안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

\* 새정부 경제성장전략(8.22), 26년 정부예산안(8.26) 등

■ 산업부, AI수석실 등과 5극3특 초광역권별 시범 프로젝트 추진 협의(‘25.8)

- 지방위 설계도(안)을 기초로 분야별 관계부처· 시도 실무협의(7회), 위원장 주재 11개 관계부처 실국장협의(9.3)를 거쳐 국무회의 토의안건 상정(9.1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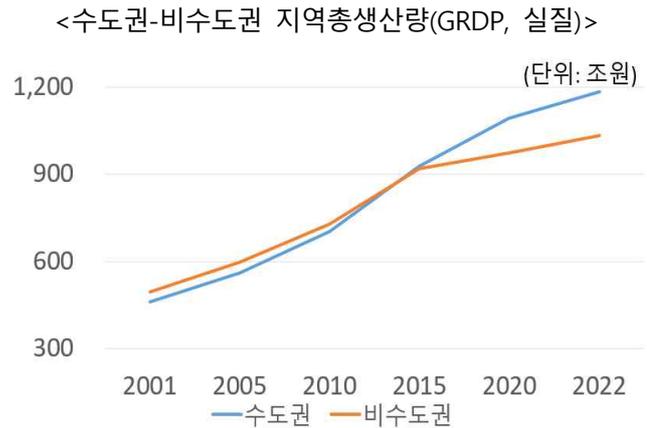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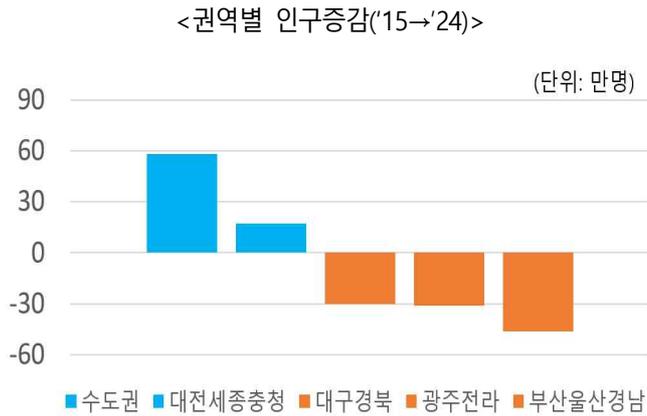
- 국무회의 토의시 논의된 사항을 추가하여 관계부처 회람 후 지방시대위 1차 회의 상정 예정(9.30)

## ※ [5극3특 추진전략 설계도 추진 의미]

- ① (국정과제 실천방안) 국정과제 중 중점과제 10번 ‘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’에 대한 실천방안으로, 경제·생활·행재정 3대분야 11개 전략과제, 144개 세부과제를 마련
  - 이는 그동안 범부처 차원 종합 실행계획 없이 추진되었던 균형성장 전략을 국정기획위, 대통령정책실 및 기재부·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하에 총괄·체계화한 결과물임
- ② (5극3특 기반 총괄 조정) 부처별로 흩어져 개별·경쟁적으로 추진되던 과제들을 5극3특 권역별 경제·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종합화하고, 경제권·생활권·행재정으로 범주화·구체화한 정부 차원의 통합 조정의 성과 도출
  - (경제권) 초광역 단위로 경계 확장을 통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↔ 인재양성 ↔ 산·학·연 혁신거점 조성 삼각 축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
  - (생활권) 5극3특 권역별 대중교통망 구축(60분 생활권)을 중심축으로 주거·교육·의료·문화·복지 등 생활 전반의 통합적 연계 강화
  - (행재정) 권역 단위 행정체계의 구축 지원과 제도화, 초광역특별계정·초광역협약·지방우대 지원 강화를 통해 균형성장 위한 확고한 지방우대 기조를 정립하고 5극3특 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뒷받침
- ③ (새로운 국가균형성장 패러다임 제시) 나아가 지방시대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의제를 5극3특 전략 틀 안에서 재편하고, 쟁점을 관계부처와 조정·합의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패러다임을 국가 차원의 전략 및 실천방안으로 확립

## II 추진배경

- 수도권 경제·인구 집중심화, 지방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경쟁력 감소로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
  - 수도권 과밀화, 비수도권 공동화 등 국토공간 비효율적 활용으로 잠재성장률 저하,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



- 기업·자산·인프라 등의 수도권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및 경제위축, 지방인구(청년) 유출 심화 악순환
  - \* 국내 500대 기업본사 77% 수도권 집중('23), 디지털 기술기업('22) 76% 수도권 소재
  - \*\* '15부터 10년간 청년층 수도권으로 67만명 순이동(연평균 5.6만명)
- 특정지역에 자원을 집중투자하는 불균형성장과 중앙부처 주도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한계
  - 정부지원 방식도 지역별 발전정도 등 지역별 특성고려 미흡, 일률적 추진
- 수도권은 초광역 경제권으로 기능하는 반면, 비수도권은 시·도 경계의 단절적 계획·사업 추진에서 오는 비효율, 필요한 적정규모 미달
  - 중앙주도의 계획·자원배분 방식의 한계로 인해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 미흡, 중앙-지자체간 및 정부부처간 협업체계도 부재

👉 새로운 권역별 성장엔진을 장착하고,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자율형 발전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권역별 발전전략 마련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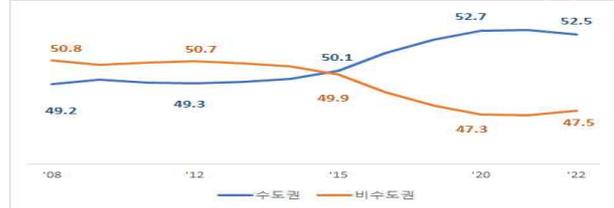
## ※ [참고]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, 지방의 현재 모습

① (수도권 집중 : 소득·인구) 수도권으로의 소득·인구 이동 추세가 지속 → 지방인구 감소 및 경제위축 심화 → 지방청년 유출 심화 악순환

▪ (소득) '15년 수도권 GRDP의 비수도권 역전 이후 격차 증가 추세

\* 수도권 GRDP 비중 : ('15) 50.1% → ('22) 52.5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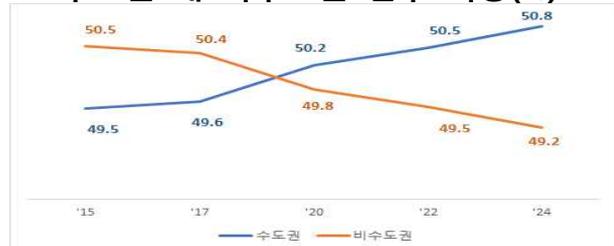
<수도권 대 비수도권 지역총생산 비중(%)>



▪ (인구) 수도권 인구 비중 및 청년 인구 모두 50% 초과

\* 수도권 인구 비중 : ('19) 50.0% → ('24) 50.8% / 청년인구 비중 : ('18) 52.3% → ('22) 53.9%

<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 비중(%)>



▪ (청년인구) '15부터 10년간 청년층 수도권으로 67만명 순이동(연평균 5.6만명)

② (기업, R&D) 국내500대 기업 및 AI·디지털 등 주요 전략기술 기업의 수도권 비중 과반 초과\*, 국가 R&D 예산 수도권 집중\*\*

\* 국내 500대 기업 본사소재지의 77%가 수도권에 집중('23), 수도권 소재 디지털 기술 기업('22): 76.5% / 혁신산업 수도권 비중('22): 63.4%

\*\* 국가 R&D 예산 비중 : 수도권 74.2%, 대전·세종·충남 12.7%, 기타 지방 13.1%

③ (자산·부동산) 수도권 가구당 평균자산이 비수도권 대비 1.6배 높고, 아파트 중위 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지속 확대(25년, 2.6배)

\* 가구당 평균자산('24년기준) : 수도권 6.7억/비수도권 4.2억 = 1.6배

\*\* 아파트 중위가격 추이(수도권/비수도권) : '15(332/161백만원, 2.0배) → '25년(535/204백만원, 2.6배)

④ (인프라) 수도권 중심 광역교통망과 편중된 대중교통\*\* 체계로 인해 지역주민 이동 편의성 제한

\* 대중교통분담률('22) : 서울(54%), 경기(24%), 부산(32%), 광주(17%), 경북(10%), 전남(9%)

\*\*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이동시간 : 대도시(1.3), 중소도시(1.7), 농어촌(2.0)

- (교육·의료) 지역 학생수 감소로 인한 초·중·고 폐교의 확산, 지역의 취약한 의료 현실로 인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 이용 증가 등

\* (교육) 수도권/비수도권 폐교 수 : ('22) 3개 / 22개, ('23) 4개 / 17개, ('24) 7개 / 26개 (의료) 서울 소재 의료기관의 타 지역 비중('23): (진료인원) 41.7% / (진료비) 36.4%

⑤ (지방재정) 중앙 의존적 구조\* 지속, 수도권/비수도권의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방세수 기반 취약\*\*

\* 재정자립도('23): 50.1%, 국세-지방세 비율('23): 75%:25%, 중앙-지방 재정사용액 비율('23): 4 : 6

\*\* 납세자 감소, 기업의 수도권 집중, 부동산 가격하락 → 지방세수 부족현상 심화

비전

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

목표

잠재성장률 3%+, 비수도권 GRDP 50%+

3대 분야, 11개 전략과제, 144개 세부과제

전략과제

1 5극3특 경제권: 성장과 집중

기업이 투자하고  
청년이 꿈을 키우는 지역

1. 5극3특 성장엔진 육성
2. 권역별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
3.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
4.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
5. 5극3특 산·학·연 혁신성장거점 조성

2 5극3특 생활권: 연결과 확산

편리하게 오가고,  
함께 누리는 삶의 공간

6. 국토공간 재설계
7.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망 강화
8. 주거·의료·복지 등 통합연계망 강화
9. K-농산어촌 조성

추진기반

3 행·재정기반 구축

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

행정기반

- 5극3특 권역별 거버넌스 체계 구축
- 특별지방자치단체 강화
- 5극3특 권역별 특별 협약 활성화

재정기반

- 지방 재정 확대
- 5극3특 권역별 재정체계 구축
-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

추진전략

정책프레임 전환

균형분산 → 권역 거점중심 + 네트워크 연계

규모의 확장

시·도 단위 → 5극3특 권역단위

경쟁력 유지 임계규모 내재화

인구·기업·R&D·교통망 → 패키지화

- ◇ **균등분산→권역거점 중심, 시도 단위→권역별 메가시티 단위의 경계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, 5극3특 성장엔진 구축**

- ◆ **중앙·지방 협력을 통해 5극3특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, 초광역 특별협약을 체결하여 범정부적·파격적 패키지 지원**

### [① '5극3특' 권역 단위 앵커기업 기반 성장엔진 발굴 및 육성]

- (목표) 초광역권의 첨단기술 기반 미래전략산업\* 선정 및 육성으로 권역 단위 집중투자를 통한 지역산업정책 효과성 극대화

\* 권역간 업종 차별화 또는 최소한 동일업종 내 세부업종 차별화 원칙 下, 권역별 산업 기반·성장 가능성·기업투자 가능성 등 종합 고려

\*\* 첨단제조, 문화관광, 지식서비스 등 제조업 외 지역여건을 고려한 성장동력 포함

- (추진전략) 앵커기업 이전·유치 및 대규모 신·증설 → 해당기술분야 - 혁신프로젝트(R&D) 연계 → 지역내 혁신역량\* 및 인적자본 비약적 발전 목표

\* 혁신역량 범주는 혁신여건(인적자원, 연구체계, 디지털화), 혁신투입(투자, 연구인력, 조작), 혁신행위(벤처수, 연계성, 지재권), 혁신파급(지식, 첨단산업 성과)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총체적으로 의미

- (추진방식) 국가산업전략 및 지역여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, 정부-지자체간 협력에 기반하여, '5극3특 성장엔진' 선정\*

\* 지방위·관계부처가 합동 TF 구성 → 권역별 산·학·연·관 간담회로 투자수요 발굴·구체화 → 쟁점 해소부터 협약 체결까지 전 과정 지원

- 중앙정부 주도 단순 선정·지원이 아닌, 중앙-지방 협력을 통해 성장엔진을 발굴, 부처의 종합적인(패키지) 지원을 통해 초광역권 산·학·연·관 협력 생태계 조성

- (절차) 성장엔진 추진가이드\*(25.11月, 산업부) → 민관합동 성장엔진 투자계획(중앙·지방위·지자체) 마련 → 지방위 의결(26.3月, 성장엔진 선정) → 투자·지원 계획 구체화 및 초광역특별협약 체결(중앙·지방·지방위·기업 등)

\* [성장엔진 발굴기준]+[중앙-지역 협의기반 후보산업군]+[관계부처 협의기반 지원패키지]

<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시범 프로젝트 추진(25.下 시범사업 발굴) >

- ▶ [대상] 5극3특별 산업·기업 역량, 지역여건 고려 투자실현가능성 높은 사례\* 중심  
\* 예시) 부산울산경남 제조혁신 AIDC(SK), 광주전남 AI 재생에너지, 충청권 바이오 클러스터 등
- ▶ [지원] 인력(대학)·규제·투자보조·R&D·창업·정주 패키지
- ▶ [협약] 기업-중앙-지방정부 간 투자협약으로 지원
- ▶ [추진방안(안)] 권역별 既투자사업 기반 시범 프로젝트 추진방안 수립 → 기업 발굴 및 프로젝트 구체화 → 기업 맞춤형 범부처 지원 패키지 구성 → 기업-중앙-지방간 초광역 협약 체결

○ (초광역특별협약) '성장엔진 선정' 및 '성장 5종세트 패키지' 지원에 대해 중앙·지자체 등이 참여\*하는 **협약으로 범정부적·파격적 지원**

\*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 참여대상(예시) : 중앙정부, 지방정부, 지방시대위원회, 기업, 대학 등

**[② '5극3특' 성장 5종세트 패키지 지원]**

(1) (인재양성) 서울대 10개\* 만들기, RISE 체계 재구조화\*\* 등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체계 개편 및 지산학연 협력 대폭 확대

\* 지역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, 지산학연 협력, 우수교원 유치, 취창업 보장 교육 확대 등

\*\* 초광역 RISE센터 독립법인 신설 및 초광역 RISE위원회 구성·운영

- (대학)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 '특성화 대학원-학부-연구소' 운영

- (첨단인재) 대학-기업 연계 학사제도\* 추진, 한국형 인재리턴 프로젝트\*\* 추진

\* 탄력적 학사제도 도입(대학-기업 공동운영 계약학과계약정원제 설치·운영, 가형산업학위제, 사내대학원 설치 등)

\*\* 해외 우수인재 유치(대학교원 국내·외대학 겸직근거 마련, AI 해외 Top-tier급 인재유치, 인건비·연구비·기자재 패키지 지원 등)

- (실무인재) 협약형 특성화고\* 지정·운영, 직업계고-전문대-대학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특화 실무인재 양성

\* '협약형 특성화고' 지정·운영을 통한 졸업 후 채용 연계, 직업계고-전문대-대학 학제 연계 강화

(2) (강력한 규제완화)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혁신활동 환경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앵커기업 유치 지원

- 성장엔진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규제\*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유관 기업활동·혁신활동의 거점화

\* 성장엔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병목규제 해소,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을 통해 기업 활동과 혁신활동 거점화 추진

- 초광역특별협약 시 권역별 메가특구 추진방향을 합의·추진하며, 구체적인 지역 적용 방안 마련

- (3) **(혁신지원 패키지)** 성장엔진 산업별로 대형 R&D프로젝트, 인프라, 고급인력 양성, 혁신시장 창출 등 혁신활동 전주기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의 자생적 혁신기반 확충
- **(R&D)** 성장엔진 맞춤형 기업투자 연계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발주 및 지역이 주도하는 '지역 자율 R&D' 체계로 전환
    - \* 지역 자율 R&D 전환 지원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및 現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체계 격상·개편(위원장: 과학기술혁신본부장→지방시대위원장·과기정통부 장관 공동)
  - **(인프라 확충)** 연구개발 시설, 핵심장비, 지원기관 및 조직의 확충을 통해 지역혁신주체의 원활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
  - **(고급인력)**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역의 성장엔진 분야 고급인적자원 육성 및 연구개발활동 지원 확대
  - **(혁신시장창출)** 공공조달·구매 인센티브를 통해 혁신성과의 시장 창출 유도 (예, 혁신제품 시범 구매)
- (4) **(재정지원)** 초광역특별계정 신설, 권역별 성장엔진 R&D·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검토·추진
- (5) **(펀드지원)** 정부 주도 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 확보\* 및 지역성장펀드 등 조성\*을 통해 지역 성장엔진 산업육성 집중
- \* 예)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및 벤처투자시장 40조원 중 비수도권 목표 각각 40% 이상으로 설정
  - 초광역권별 <sup>가칭</sup>지역투자공사를 통해 비수도권 산업펀드를 권역 단위로 운영하여 5극3특 산업전략 관점에 기반한 집중투자 도모

### [㉓ 지방투자유인 기반제도 개선]

- **(보조금 확대)** 지투보조금 규모·한도 확대 등 지방투자 유인강화\*

\* 지투보조금 규모·한도 확대('25년 2,251억원 → '26년 2,553억원, 한도 200→300억원<sup>균형발전하위지역限</sup>,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·재정·규제특례 등 인센티브 강화

- **(투자환경)**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, 주택공급 우선지원,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, 지방이전 근로자가 수혜자가 되는 정주 지원

## ◆ 권역별 AI혁신거점의 조성, 지역산업 AX전환 생태계 구축 및 지역 중소·중견기업 사업 재편 등을 통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

### [① 권역별 지역주력산업 공정혁신 지원]

○ (권역별 AI혁신거점 조성) 광주·대구·전북·경남 4대 권역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대규모 AX 연구·실증 거점 우선 조성\* 추진

- 타 권역의 경우 AX 준비현황, 지역 특화산업 등 고려하여 순차적 조성 검토

\* 총 3.1조 규모 예타면제 의결(과기정통부, 최종 사업규모는 적정성 검토후 확정, '26.上)

지역	주무부처	구분	사업개요
광주	과기,산업	AX 실증밸리	도시생활혁신, 모빌리티·에너지 AX R&D·실증
대구	과기,산업,복지	AX R&D 허브	로봇·바이오 AX R&D
전북	과기	AI팩토리 테스트베드	피지컬AI 기반 AI팩토리 핵심기술 개발 (협업지능 K-AI팩토리 SW플랫폼 기술개발 및 제조공장 실증)
경남	과기	정밀제조 연구거점	제조특화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 (초정밀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표준협력 체계 구축)

- (권역별 TechHub\* 조성방안) 5극3특 별 구축(실증, R&D 지원) 및 기술지원 기관간 연계를\*\*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 실증테스트베드 지원

\* (TechHub) 미국의 '메뉴팩처링USA'에서 첨단산업 집적지 인근에 산학연 연계거점 (장비지원, 실증거점)을 설치하고, 산업현장의 혁신생태계 강화 지원

\*\* 기존 정부출연연 지역분소(63개)와 다양한 기술지원기관(약500여개)들의 장비/조직/인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형태로 관련사업을 지원

### [② 지역산업 AX전환 생태계 구축]

○ (AX전환(공급기업, 지원인력) 생태계 강화) 지역 AX선도기업(예, LG엑사원)의 AX 상생모델 구축\* 및 AX자원 활용확산을 지원하고, 지역 AX 공급기업 육성\*\*

\* ('25년) 중기부-LG전자-경남 협업, 자체 LLM(엑사원) 활용 상생형 AI공장 구축(80억)  
→ ('26년) 타 지역 및 기업으로 확대(200억)

\*\*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추진: 기술력 있는 AX 공급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지정, 맞춤형 지원

○ (제조AI혁신센터 설립) 권역별 특화 AI 팩토리(개방형 AX 테스트베드, 데이터 플랫폼)와 공정 시뮬레이션센터 설치, AX 엔지니어\* 운용(인력, 서비스 공급)  
→ AX전문가 활용 바우처 지급(AX서비스 활용, 재정지원)

\* 제조AX의 다양한 적용환경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(데이터 클리닝, 수집개선 등)

- (AX 혁신인력) AI특화계약학과 및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AI 인재 양성\*과 AI 연구인력의 기업 매칭서비스\*\* 강화 등 AI인력 생태계 강화
  - \* AI 부트캠프('26년 37개 신설), AI 특화 계약학과 신설('26년 10개), 지역지능화혁신인재 양성 연구센터 확대('25. 15개 → '26. 17개) 등,
  - \*\* 연구인력 혁신센터 5극3특별 확대(4→8개)
- (AX 실증산단) 지역 거점산단별 전략업종 대상 AX 솔루션 도입 실증 (AX 대표선도공장), AX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AX 선도산단 조성
  - \* '25년 10개 산단을 시작으로 '26년 13개 산단(누적) 등 순차 확대 조성 및 신규 국가 산단도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 기반 구축

### [③ 중소·중견기업 사업재편 지원 및 특화단지 연계강화]

- (사업전환 컨설팅) 5극3특 단위에서 지역주력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의 대상을 검토하고,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·중견기업 사업전환 지원
  -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권역-기업의 주체에게 기존 인센티브\*를 확대 지원하고, 권역별로 조성하는 펀드를 연계
    - \*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사항 (▲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, ▲양도차익 과세이연, ▲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, ▲정부 기술개발(R&D) 사업 참여 우대)
- (지역전략산업 중심 특화단지 연계) 소부장 특화단지(10개),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(12개), 뿌리산업 특화단지(61개) 등을 권역 단위 연계·시너지 창출
- (5극3특 전략산업전시회) 성장엔진과 연계한 글로벌 전시회\* 육성을 통해 수출·지역경제 활성화 및 K-컬처·지역관광 연계 추진
  - \* (1단계: '26~'28) 5극3특 총 6개 → (2단계: '28~'30) 5극3특 총 2개 집중지원
- (특구정비) 5극3특 경제권형성 전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특구 및 산단 정비를 위한 종합적·단계적 방안 마련

### [④ 권역별 관광 인프라·콘텐츠 구축]

- (K-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신설) 방문·이동<sup>국토·문체부</sup>+숙박·음식<sup>농림·문체부</sup>+ 체험<sup>문체부·지자체</sup> 등 다부처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 지원\*
  - \* 범부처 관광통합 지원체계 가칭K-지역관광 TF 구축, 통합상품 개발+홍보·마케팅+ AI 혁신관광서비스·체험+역내교통+인력양성 등 통합지원
- (교통거점-관광지 연계) 주요 교통거점(공항·KTX역·터미널 등)에서 관광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
  - \* 국제공항 입국 관광객 지방 환승지원(철도, 버스 등) 및 관광택시 서비스 확대 등
- (콘텐츠 개발)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광역관광개발을 관광테마(산악·해양 등) 중심으로 개편하는 광역관광개발 2.0 추진
  - \* 외국인 관광객의 비수도권 확산을 위해 지방에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

◆ 권역별 투자재원 확대 및 <sup>가칭</sup>지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해 균형 성장을 견인할 5극3특 권역별 투자 생태계 조성

### [1] 정부주도 펀드의 지역투자 확대]

- (국민성장펀드) 정부는 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, 기술기업 등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(5년간 150조원 이상) 조성 中
- 비수도권 할당 비율 극대화(40% 수준)를 위해 5극3특 성장 등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프로젝트 등 발굴\* 추진(~'30)

#### 【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】 ※ 새정부 경제성장전략(25. 8)

- ① (규모) 첨단전략산업기금, 민간자금(연기금·민간금융·국민 등) 활용 1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 →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공유



- ② (투자대상) AI 등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+ 관련 기술·벤처기업
- 특히, AI 산업은 지원규모를 별도 할당
- ③ (지원방식) 중소·벤처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 지원 +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대출 등 맞춤형 지원
- ④ (거버넌스) 산업경쟁력장관회의에서 전략산업 판단 등 주요사항 결정 + 세부 펀드운용은 민간중심 운용위원회에서 결정(운용실적 산경장 보고)

- (벤처투자) 정부는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벤처·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을 위해 연간 40조원의 벤처투자시장 조성 中
  - 비수도권 투자 비중 확대(40% 수준)를 위해 지역의 투자 인프라 확충, 지역성장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인센티브 부여 추진
    - (지역성장펀드)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지역사회 혁신자금을 집약하여 권역별 지역성장펀드(총 3.5조원) 조성(~'30)
    - (투자 인프라) 지역 벤처투자 거점 확충을 위해 지역엔젤투자허브(기존 4개소)를 권역별로 확대하고, 초광역 추진체 거버넌스 내 편입(~'30)
  - \* 한국벤처투자 사무소(기존1개소→4극3특) 확대 및 초광역 추진체와 연계
    - (지역투자 인센티브) 모태펀드 출자 벤처펀드에 지역투자 인센티브\* 부여
    - \* 지역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 인정비율 상향(100%→120%), 지역 기업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의무를 제안하는 펀드 우대 선정 등
- (R&D 지역펀드) 연구개발특구 연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딥테크 연구소기업 등의 창업·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펀드 조성

## [2] 권역별 <sup>가칭</sup>지역투자공사 설립]

- (설립 방향) 일부권역에 우선 설립하고, 시범운영 후 투자실적 등 고려하여 타 권역 확대 검토(~'27)

### **【권역별 <sup>가칭</sup>지역투자공사 법안(정무위, 산자위) 발의 내용】**

- ① (법안) 동남권(민병덕 의원) 및 충청권(장철민 의원) 대상 법안 발의
- ② (주무부처) 부울경권은 금융위, 충청권은 산업부를 주무부처로 설정
- ③ (자본금) 지방정부와 국책은행(산은·기은·수은)등 3조원 자본금 출자 검토
- ④ (거버넌스) 중앙부처, 지방정부, 중앙부처 위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 구성
  - \* 법안심사 진행경과 : 발의(총4.28, 특6.2), 상정(총9.8, 특8.26), 소위(총9.9)

- (지원분야) 지역특성을 고려한 금융사업 및 첨단전략산업, 벤처·스타트업, 주력산업 등

◆ 서울대 10개 만들기, 권역별 인재양성 사업 추진 등을 통한 5극3특 전략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

① 5극3특 전략산업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및 라이즈 체계 재구조화

- (지역 거점국립대 육성)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-대학원-연구소'패키지 육성\*, 학생 교육비 지원 확대

\* 산업분야 추진과제 확정과 연계해 권역별 인재양성 추진 / ('26) 3교 우선추진 → ('27~) 단계적 확대 / 서울대 10개 만들기 로드맵 마련(~'25)

- (산학연 연구 협력 생태계 구축) 지역 거점국립대 중심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연연·과기원·산업계 등과 협력\* 활성화

\*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여 인재양성·공동연구·투자부터 기술사업화까지 전면적 협력체계 구축 (산학연협력 고도화 : '26. 2,625억원)

- (혁신 선도 지방대 지원) 높은 혁신역량을 지닌 지방대 투자 확대\* 및 규제 특례\*\* 등을 통해 지역 허브인 지역 거점국립대와 동반 성장 지원

\* (특성화 인센티브) 대학혁신지원 850억원('26), 전문대학 혁신지원 340억원('26)

\*\* 국립대 주요보직에 기업우수 인재 등 임용, 전임교원 정원·비전임교원 채용절차·정년기준 완화 등

- (권역별 대학혁신 플랫폼 구축) 5극3특 권역별 인재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체계 개편\* 및 라이즈 체계 연계 사업\*\* 발굴·추진

\* (거버넌스) 초광역 라이즈위원회 구성·운영('26~), 초광역 라이즈센터(독립법인) 신설('27~), ('26 예산) 21조원(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등 약 2,000억원 증액) / 가칭라이즈체계 발전방안 수립(~'25)

\*\* (메가공유대학) 지역 거점대 중심 공동 교육과정 개발·운영, 인프라 공유 등, (산학연 클러스터 연계) 산학연협력단지, 캠퍼스 혁신파크, 산학융합지구 등 연계로 기업참여 활성화, 공동 R&D 등 지산학연 협력 활성화, (취업) 대학-산업체 간 계약학과·계약정원제 설치·운영 등, (창업) 대학 중심 창업 경제권(정부·지자체 등 네트워크) 공동 창업 지원 등

## [2] 지역산업과 연계한 투트랙(첨단 기술인재·지역 특화 실무인재) 인재 양성 체계 구축

- (첨단 기술인재) 대학-기업 연계 탄력적 학사제도 추진\*, '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'를 통한 해외 우수인재 유치 추진

\* 대학-기업 공동운영 계약학과·계약정원제 또는 <sup>가</sup>산업학위제, 사내대학원 설치·운영

### <한국형 인재 리턴 프로젝트>

△외국대학 교원 국내대학 임용 시 외국대학 겸직 근거 마련

△AI 해외 Top-tier급 인재 유치(기관·기업 매칭, 인재 파격 지원)

△5극 3특 해외 우수 인재 유치(인건비·연구비·기자재 패키지 지원, 과기정통부 Brain Pool 인재유치사업 활용 등)

- (지역 특화 실무인재)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·운영\*, 직업계고-전문대-대학 학제 연계 강화 및 학사자격 다변화\*\*로 지역 실무인재 양성

\* 고교-중소기업 간 학생 공동 선발 및 교육과정 공동 설계, 졸업 후 학생 채용 연계 등을 포함한 우수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'30년까지 50교 지정(1교당 5년 간 약 45억 원 지원)

\*\* 3+1 전문학사(직업계고(3년)-전문대(1년) 간 전문학사 과정 연계), 2+3 마이스터 학사(산업체 경력(2년)을 학사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) 등

## [3] 지역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-취·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

- (지역 교육여건 개선) 초·중등 단계 유연한 학교 체계\* 구축, 지역 내 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한 지원\*\* 확대

\* 농어촌학교 대상 교육프로그램 다변화·내실화를 지원하여 지역 학교의 교육의 질 제고 / 자율형 공립고 20(농산어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자율적 교육 모델 운영 고교) 확산 및 운영 내실화 지원

\*\* 수준 높은 대학원·국가연구소 연계 운영 및 해당 대학원생 장학금·생활비 파격 지원

- (지역 수요 반영 강화) 지역별 라이즈 기본계획 추진 시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를 통해 기업 수요 반영 등 지산학연 협업 강화

- (취·창업 지원) 지역수요 반영 「계약학과 설치·운영 기준」 개정, 대학 내 학교기업 강화로 취·창업 플랫폼 육성, 대학창업펀드 지원

◆ 부처별 산·학·연 사업을 묶음사업으로 통합기획 및 운영방안을 마련,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

① 권역 내 산·학·연 혁신성장거점도시(職·住·樂 일체) 조성

- (혁신성장거점 조성) 판교 혁신클러스터에 상응하는 세계적 수준 산·학·연 혁신생태계/창업거점을 초광역권에 구축
  - 현재 부처별로 진행되는 거점조성사업\*을 지방시대위 주도 5극3특 시너지 프로젝트로 '산·학·연 혁신성장 거점도시' 통합 조성·운영\*\*
    - \* 1) 현재 추진 중인 첨단 국가산단과 첨단 국가산단+도심융합특구+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여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
    - 2) 국토부 '캠퍼스 혁신파크', '도심융합특구', 산업부 '산학융합지구', 과기정통부 '연구개발 특구' 등 혁신공간과 혁신사업 연계 필요
  - \*\* 산·학·연 혁신성장거점도시 선정 및 지원계획(안) 마련 및 선도사업 1~2개 선정(~'26, 上)
    - 정부와 권역 간 협의(~'25)를 통해 혁신성장거점으로 연계·지원할 사업\*을 포함한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\*\*(안) 마련(~'26)
      - \* 혁신거점 내 산·학·연 공동R&D 및 사업화촉진 사업 집중지원, 혁신기관(R&D센터, 기업 연구소)의 혁신거점내 집중 유치
    - \*\* 現 '지방자치균형발전법' 상 '지역발전투자협약' 사업내용에 포함 → 지방시대위 심의·의결
  - 거점조성사업들을 집중하여 규제·세제·R&D 등 지원을 집적하고 패스트 트랙을 적용하여 신속 추진 가능토록 지원체계\* 마련
    - \* 「광역권 성장지원 특별법」 제정, 지방시대위 심의를 통해 광역권 핵심사업 선정·신속 추진
- (기술창업거점 활성화) 투자, 인프라, 인재 등이 결합된 지역거점 창업 도시를 조성하여 벤처·스타트업의 지역의 재도약 성장엔진으로 장착
  - (투자)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의 스케일업을 위한 '지역성장펀드\*'를 조성하고, 펀드를 운용·관리하는 KVIC(한국벤처투자) 지역사무소 확충
    - \* 모펀드 2조원, 자펀드 3.5조원, ~'30

- (인프라) 창업 역량의 집적 효과를 위해 창업 주체간 협력·지원(투자, 사업화 등)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창업공간(스타트업파크) 조성
- (창업인력) 지역의 혁신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과기특성화대 및 지역 거점대 중심 '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' 신규 지정 및 '창업중심대학' 확대
- (거버넌스 등) 지역 내 혁신자원을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, 창업·벤처 붐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'창업 페스티벌' 개최
- (부처협업) 지방시대위 협업으로 지역(예, 중·소도시)을 선정하고, 지역 성장 지원 타부처 정책과제와 연계하여 '창업도시' 조성 효과 극대화

## [2] 산·학·연 혁신성장거점도시와 연계된 복수의 거점도시 조성

- (거점 조성) 권역 내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균형 성장을 위해 특성화된 거점 도시를 복수로 육성, 성장동력 확산
  - 해당 지역의 특장점에 기반한 특성화된 권역 내 거점도시 지향, 지역주력 산업 기반 R&D 및 지역대학 인재양성체계(RISE 재구조화)와 연계
  - 각 부처의 거점조성사업 중 일부가 균형거점에도 입지할 수 있도록 '산업-교육-R&D-도시기반' 중장기 전략(청사진)의 권역단위 통합설계
    - \* 지역거점에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('26)
    - \*\* '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' 개편안 마련('25) 및 추가 지정(~'30)
- (혁신성장거점과 연계) 거점도시로 성장동력이 집중(압축)하면서 공간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
  - 권역 내 거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도록 광역교통망 구축 및 강화
  - 중소도시가 주변지역의 중추도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

## [3] 부처별 거점조성사업 평가 및 재설계

- 권역별 산·학·연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25년, 부처별 유관사업 평가를 통해 구조개편 및 재설계

- ◇ 시도 단위→5극3특 권역별거점 중심축으로 네트워크 연계 강화, 인구·기업·R&D·교통망 패키지화 지원으로 생활권 연계와 확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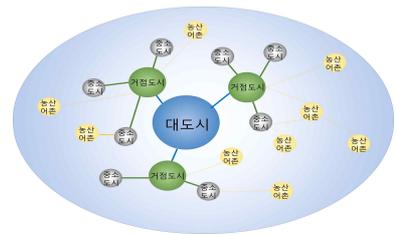
## 1

## 국토공간 재설계

- ◆ 5극3특 권역별 체계로 국토공간 재편을 위한 공간전략과 지원체계 마련

### [1] 5극3특 권역별 체계로 국토공간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

- (국토종합전략) '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('26~'40)'을 통해 5극3특 경제·생활권 조성을 위한 대도시권 혁신, 거점도시권 육성전략 제시
  - 초광역권계획, 도종합계획 등 기존 국토공간계획 체계를 활용하여 5극은 메가시티 중심의 초광역권 육성, 3특은 특화성장 지원기반 마련
- (5극 대도시권 육성) 산업·교통·관광 등을 종합한 '초광역권계획' 마련, 대도시권, 거점도시권 육성 및 거점도시와 중소도시·농산어촌 연계 강화
  - \* 초광역권 내 공간위계 : 대도시 - 거점도시 - 중소도시·농산어촌
- (대도시권) 권역 내 중심도시를 메가시티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변 도시와 기능 연계 강화
- (거점도시권) 권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거점도시와 주변 중소도시와 연계하여 거점도시권 육성



- (3특 특화성장 지원) 전북·강원·제주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'특별자치도 종합계획' 마련

#### < 특화성장지역 발전전략(안) >

- ▷(전북) 전주권 중심의 혁신성장거점+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메가시티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, 서해권 물류거점 통한 새만금 완성
- ▷(강원) 춘천-속초 철도, GTX 연장 등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관광수도로 육성하고 바이오·의료 등 지역특화산업 성장 기반 마련
- ▷(제주) 제2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휴양·레저 중심의 세계적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헬스케어·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

- (국가 균형거점 강화)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,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거점 강화
- (행정수도) 대통령집무실·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(25.9, 국제공모 착수) 마련 ⇒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 행정수도 완성
-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도시·교통계획을 수립하고 CTX와 경부선 연결, 서울~세종 고속도 등 교통망 확충하여 서울·전국과의 연결 강화
- (새만금) 태양광·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고 항만·철도·도로 등 기반시설 완성이므로 서해권 물류거점 육성
- (공공기관 이전)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에 착수(25.下)하여, '26년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'27년 임차청사 등 방법으로 선도이전 시작
-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관 배치, 지역인재 채용 확대, 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 창출

## 2

## 권역별 60분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망 강화

◆ 5극3특 권역별 광역교통망과 권역 간 국가교통망 연결 등 국토 전반의 연결성을 강화하고, 생활권 단위 대중교통 확대하여 교통불편 해소

### [1] 계획-투자-운영 일원화를 위한 초광역권 교통계획체계 정비]

- (권역별 교통계획 연계) 단기적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광역버스·BRT를 활성화
- 장기적으로 권역별 단일생활권 구축 위한 대중교통망계획\*을 수립, 광역교통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간선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서비스 강화
- \* 초광역권계획(「국토기본법」), 초광역권발전계획(「지방자치분권」) 등 기존 계획체계 활용 검토
- (대광위 조정기능 강화) 대광위 내 갈등조정위를 설치하여 분쟁조정 기능을 전담하고 기존 권역별 위원회의 광역교통 정책 및 사업 평가역할 강화

## [㉔] 생활권 연결 제고 위한 대중교통 확충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]

- (광역급행버스 확대) 광역교통 취약지역에 광역버스망(M-bus, BRT)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
  - \* '광역교통시행계획'(26. 上)을 통해 6대 도시권 BRT 활성화 지원
  - \*\* 제2차 BRT 종합계획 수립(26.6)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 및 교통 사각 지역에 BRT 도입
- (대중교통비 부담 경감) 대중교통(버스·지하철·광역버스)을 월 9~10만원부담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 전국 확대
  - \* '26년 예산 5,274억원 (버스·지하철) 청년·어르신·다자녀 월 5.5만원 / 일반 6.2만원 (광역버스·GTX 포함시) 청년·어르신·다자녀 월 9만원 / 일반 10만원
- (생활권 내 이동지원) 농어촌 맞춤형 DRT 사업을 확대하고, 기존 '공공형 버스·택시 지원사업'을 시·군·구 주도 DRT 사업으로 개편
- (공공형 택시) 지역 수요에 맞는 공공형 택시 서비스 지속 지원

## [㉕] (단기)대중교통망 + (중장기)철도·도로망 등 구축으로 초광역권 연결성 강화]

- (광역철도망) 부산~양산~울산, 용문~홍천 등 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광역 철도로 연결하여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도록 정비
  - \* 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(25.7)로 기본계획 수립 착수
  - \*\* 지역 특성상 빠른 이동서비스 필요시 GTX급(최대 180km/h) 광역급행철도(x-TX) 병행
- (도시철도) 권역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\*을 적극 추진하고, 이동편의 개선 및 적기 개통을 위한 지원 확대\*\*
  - \* (공사중) 광주2호선, 양산도시철도, 대전2호선 등/(설계) 대구엑스코선, 울산1호선, 부산하단~녹산
  - \*\* 도시철도 공사 적기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대(26, 0.5 → 0.8조원)
- (전국 철도망)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'4×4 고속철도망' 구축을 가속화 하여 고속철도 수혜면적을 전국 약 57%(임기 내 53%)로 확대

- (국가 간선도로망) 새만금-전주, 세종-안성, 함양-창녕 고속도로 등 전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 적기개통(~'30) 및 도로망 보완
  - '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('26~'30)' 수립 시, 광역권 지원을 위한 방사형 순환 도로망 보완 및 물류·관광거점 간 연결성 강화
- (거점공항) 가덕·TK·청주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, 전용 운수권 확대, 연계 교통망 등을 통해 지방공항 활성화\* 지원
  - \* (청주공항) 천안-청주공항 철도 / (무안공항)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

#### [4] 5극3특 통합 환승체계 강화

- (환승센터) 전국 주요 거점 내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통합교통 서비스플랫폼(K-MaaS) 활성화 등 스마트 대중교통시스템 구축
- (통합환승제도)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통합환승제도를 5극3특 단위로 확대하고, 통합요금제 도입\*을 통한 환승시스템 구축 추진
  - \* 지자체·운송사간 갈등 협의·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통합환승혜택 확대방안 검토

3

주거·교육·의료·복지 등 통합연계망 강화

◆ 주거·교육·의료·복지·문화의 완결성 있는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 생활안전망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

#### [1] 지역 주거·문화여건 개선

- (주거환경 개선) 주거·돌봄·문화복지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
  - 지역활력타운 사업 추진, 돌봄·의료·문화·교통 등 생활인프라·서비스 협약\*을 통한 지역간 연계체계 구축 등 중소도시의 기본 정주권 보장
  - \* 여러 사·군이 돌봄의료(복지부), 문화(문체부), 교통(국토부) 등 사업계획을 마련해 범부처 지원 협약

- (권역별 문화거점 육성) 지역거점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대하고, 문화선도산단 확대\*

\* '25년 3개소(구미·완주·창원) → '26년 3개소 추가지정

- 지역 문화거점인 문예회관의 기능을 강화(+공연·전시 등)하고, 우수한 공연·전시 지역순회 적극 지원하여 지역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

## [2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협력 강화]

- (공공의료체계 강화) 권역별 거점병원을 집중 육성하고, <sup>중앙</sup>국립중앙의료원-<sup>권역</sup>국립대병원-<sup>지역</sup>지방의료원·보건소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

\* 국립대병원 24시간 진료체계 지원('26년 126억원),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한 권역·지역별 책임의료기관과의 수련·임상협력, 국립대병원-민간병원 연계로 필수·공공의료 전달체계 확립

- (진료권역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) 지방의료원 신설,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수행 병원 공공성 평가·보상

- (지역·필수의료 기반 조성) <sup>▲인력양성</sup>지역의사제\*·<sup>가칭</sup>공공의료사관학교, 지역의대 신설, <sup>▲보상강화</sup>지역수가제도 및 지역필수의료 별도 채용체계 신설\*\* 추진

\*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·지원, 졸업 후 일정기간 의무 복무

\*\* 인력·시설·장비 지역·필수의료 기반 확충, 지역의 필수의료대책 수립·시행 지원

- (소아·응급의료체계 강화) 지역 중증·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구축 및 보상 강화, 야간·휴일 소아환자 진료협력체계\* 구축

\* (경증)달빛어린이병원-(중등증)소아긴급센터-(중증)소아응급센터 연계,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

- (의료취약지역 비대면진료) 사회적 합의(의료법 개정) 기반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 마련, 농어촌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·원격협진체계 신설

\*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체계 마련,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·운영 추진('27년)

### [③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]

- (통합돌봄체계 구축) 지자체가 주도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·장애인 등에게 맞춤형으로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\*
  - \* '26.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('25년71억원 → '26년777억원), 전담조직·인력 확충 추진
- (재택의료센터 확충) 공공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한 재택의료센터('25년 195개소) 단계적 확충으로 재가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
  - \* 센터 없는 농산어촌은 보건소, 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하여 재택의료센터 설치
- (통합재가기관 확충) 가정방문형(방문요양+방문간호), 주야간보호형 등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('25년 183개소)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복합적 수요 대응

### [④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여건 조성]

- (교육특구) 교육규제 합리화를 위해 「교육특구 지정·운영 추진계획」 마련('26년 上) 및 '교육특구' 지정·운영('26년 下~) 추진
  - \* '통합학교', '365일 열린 학교', '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·학교' 등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 발굴 및 운영 지원
- (학교체제 유연화) 초·중 통합학교 운영,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,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체제 조성

4

K-농산어촌 조성

◆ 농산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기본소득 보장 및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·일터·쉼터로서 농산어촌 구현

### [① 농어촌주민 기본소득 보장]

- (햇빛연금 실시)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'햇빛연금'을 조성하고 '햇빛소득마을' 시범 추진
  - \* 저수지, 마을 공용부지·시설 등 활용하여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('25~'26, 100개소) 및 어촌 에너지 자립마을('26~'27, 5개소) 조성

- (기본소득제 도입) 인구소멸위기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 도입 근거 마련

\* 인구감소지역 시범사업('26, 24만명, 0.2조원) 및 '(가칭)농어촌기본소득법' 제정(~'26)

## [2] 머물고 싶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한 재생프로젝트 추진]

- (농촌공간계획 수립) 농촌을 주거·산업·관광 등 기능별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조기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확대

\* 139개 시·군 농촌공간계획 수립(~'26), 시·군별 1개소 농촌특화지구 조성(~'30),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개정(~'27)

- (빈집 정비)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, 정비된 빈집은 청년 일자리·창업공간으로 활용

\* 빈집철거(개소당 최대16백만원), 마을단위 빈집재생(개소당 최대23억원), 빈집거래정보제공(빈집은행) 등

- (농촌협약) 농촌 생활권 조성 및 재생을 지원하는 '농촌협약'을 '지역발전 투자협약'과 연계\*, 범부처 통합지원으로 확대

\* 지방시대위를 통해 다부처 사업을 통합 공모·지원하는 '농촌계획협약'으로 전환

- (위케이션 활성화) 4도3촌 트렌드에 맞춰 농·산·어촌 체류형 쉼터 등 확대 및 생활인구가 함께 누리는 재생거점마을 조성

\*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('26, 3개소),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('26),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(~'30, 총 24개소 추가)

\*\* 정주인구와 생활인구가 함께 활용하는 주거·작업공간 등 지원(~'30, 시·군별 1개소)

- (농어촌관광 활성화) 농어업유산, 체험형 어촌관광, K-미식벨트\*, 동서트레일\*\* 등 농어촌 특화자원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, 주민·업계 협업형 투어상품 개발

\* 장류, 김치 등 지역 미식자원 기반 30개 테마의 관광상품 개발(~'32)

\*\* 대한민국 동서 횡단(태안-울진)하는 총 849km 숲길 조성(~'27)

### [③ 청년 농어업인재 육성 및 귀농·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]

- (농어업인재 양성) 예비농업인 컨설팅·교육 도입 및 농지공급 확대로 청년농업인재를 육성하고, 영농·영어 정착지원금 지원
  - \* 청년농의 농지임차 부담 완화 위해 공공비축농지 공급 확대('25: 2.5천 → '26: 4.2천 ha)
  - \*\* 어촌정착자금 ('25.下) 평균 100만원/월 → ('27) 120
- (취·창업 활성화) 청년농의 농업법인 취업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농촌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비즈니스 생태계 촉진
  - \* 빈집·유희시설 활용 비즈니스 모델 R&D('26~'30, 250억원), 청년기업성장펀드('25~'26, 960억원)
- (귀농·귀촌 지원 확대) 귀농·귀어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·상담, 주거 인프라\* 및 주택자금\*\* 지원
  - \*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('26, 5개소)
  - \*\* 고정금리 2% 또는 변동금리, 5년 거치 10년 상환 (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) 고정금리 1.5%, 5년 거치 10년 상환
  - \*\*\* 청년바다마을 조성 : 개소당 100억원(국비50%) ('25) 3개소 → ('26) 6개소

### [④ K-푸드, 스마트농업,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등 新산업 육성]

- (K-푸드 육성) 전통주 등 지역 특산품을 수출 유망상품으로 육성\*하고,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권역단위 K-푸드플랜\*\* 수립
  - \* 식품제조·문화관광을 융합한 K-푸드파크(1개소), 광역 단위 식품융합클러스터(9개소) 조성(~'30)
  - \*\* 권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생산·소비 거점 등 연계
- (스마트농어업 확산) 생산-유통-소비 등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어업 육성지구 및 스마트 APC 확대
  - \* 시설원예 육성지구 확대('25, 5 → '30, 30개소), 스마트 APC 구축(~'30, 300개소)
  - \*\* 국가 농어업 AX플랫폼 조성('26, 807억원), 노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('26~'28, 5개소)
- (신산업 기반 강화) AI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·그린바이오 연구 인프라 및 R&D 확대
  - \*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('25, 5 → '30, 10개소),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(~'27, 5개소)

# VI 핵심 추진전략 3 <5극3특 추진기반 : 행·재정기반구축>

◇ 5극3특 권역별 행정체계 구축·제도화, 예산편성 사전조정권 강화, '초광역특별 계정 신설 등을 통해 5극3특 전략의 신속·효과적 추진 뒷받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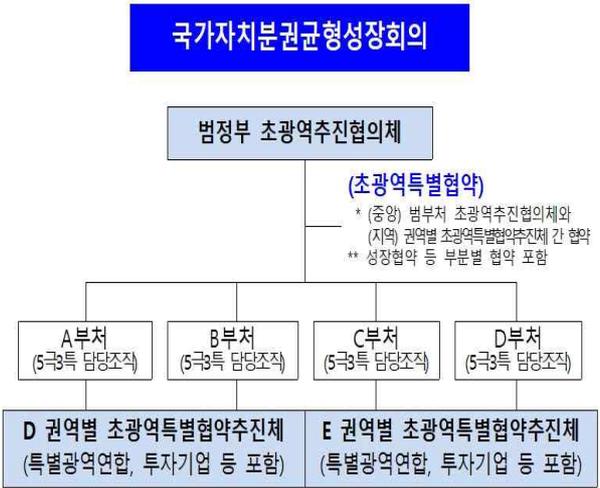
## 1 5극3특 행정기반 구축

◆ 지역주도의 5극3특 발전 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하여, 기존 행정구역 단위 체계를 과감하게 넘어서는 권역 단위 행정기반 구축

### [1] 5극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

< 5극3특 정책추진 거버넌스(안) >

- (자치분권균형성장 최고전략기구 운영) 5극3특 전략 추진, 세종 행정수도 완성, 자치분권확대 등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
- ※ 국가자치분권회의(現 중앙지방협력회의)와 연계, 논의 의제에 **균형성장을 포함**하고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확대 운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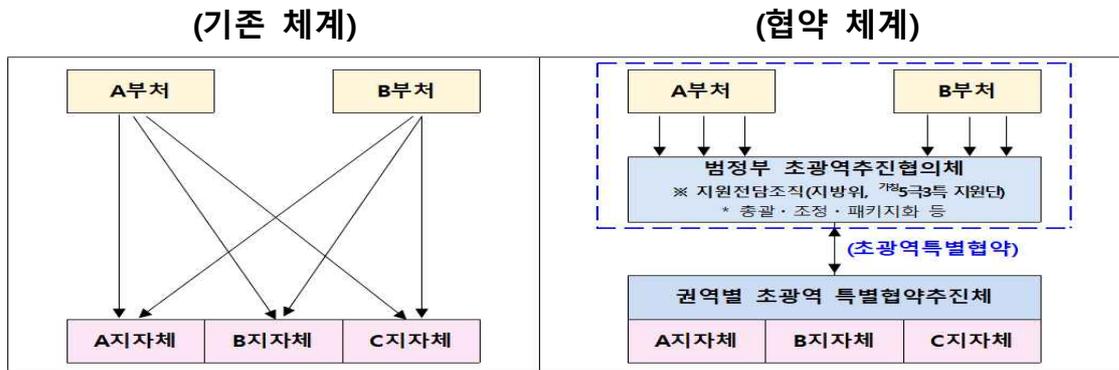
- (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) 「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」를 운영, 지방위 내 지원전담조직(가칭 5극3특 지원단) 설치(지방위)
- ※ (기능) △정책·사업의 우선순위 및 분담구조 설정, △국비 및 매칭사업 심사, △법·제도 개선(규제, 특례 등) 조정, △성과 관리 및 인센티브 심의, △자문·컨설팅 등
- (초광역특별협약추진체 구성) 초광역특별협약을 체결, 지자체-민간이 참여하는 권역별 「초광역특별협약추진체」 구성 및 사무 수행(지방위·지자체)
- ※ (특별지자체 설립 권역) 특별지자체 산하에 '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 추진체'를 직속기구로 설치 (미설립 권역) 기존 지자체 연합체(협의회)에 사업단 조직 구성, 향후 특자체 설립시 조직 이관

## [② 권역별 초광역정책 추진체계 마련: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]

- 기존 시·도별 정책추진 ⇒ 5극3특 권역 단위 사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권역별 초광역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
- (권한 강화) 실질적인 5극3특 전략 추진을 위한 특자체 권한강화
  - \* △권한(위임→이양)확대 근거 마련, △전속사무 발굴 등 사무 이양, △초광역권계정 신설, △국가공무원 파견 근거 마련, △특별지자체 소속 행정기관(사업소 등) 및 분야별 추진본부 설치, △중앙 규제권한과 별개로 특자체장에게 규제특례 권한 부여(규제특례 two-track)
- (출범 지원) 5극3특 권역별 여건에 따른 사무발굴, 조직 설계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지역 주도의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

## [③ 권역별 패키지 정책 지원: 초광역특별협약 활성화]

- (특별협약) 기존 부처별 개별적/분절적 사업 시행 ⇒ 부처별 사업을 패키지화 하고,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‘초광역특별협약\*’ 활성화
- 권역 단위의 미래전략산업육성 등 발전전략을 마련하면 부처별 성장 패키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협약 체결
- \* (대상) 5극3특 성장엔진(권역 내 연계사업 등) 및 성장 패키지(규제·혁신·금융·인재양성·재정)  
(내용) 권역별 기업유치 및 중점산업, 성장거점 조성, SOC 등 인프라 구축, 특화분야 인재양성 등



## [④ 파편화된 지방사업 추진방식 개선 : 통합공모 등 공모제도 개선]

- 기존 부처별 개별공모에 따른 중복/비효율 ⇒ 통합공모를 도입하여 지방의 예측가능성 및 정책효과 제고
- 복합타운(주거-일자리-생활SOC 등), 농촌생활권 조성 등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 도입으로 범부처 종합지원

## [6] 권역단위 분권화 강화: 지역 중심 맞춤형 권한이양

- 기존 시·도, 시·군·구 수준 일률적 권한이양 ⇒ 권역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권한이양 추진
  - (3차 일괄이양 등) 광역교통 종합계획 등 초광역 활성화 지원 사무발굴 및 3차 일괄이양을 추진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도 추진
  - (맞춤형 권한·특례 확대) 시·도 및 권역 단위 권한이양을 확대하고,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권한·특례 부여
- \* 3개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고도화 등 지역특화발전 지원(특별법 개정사항)

## 2

## 5극3특 재정기반 구축

◆ 예산편성 사전조정권 강화, '초광역특별 계정' 신설, 포괄보조 대폭 확대 등을 통해 5극3특 전략의 신속·효과적 추진 뒷받침

### [1] 지방우대 및 지방재정 확대

- (지방우대 확대) 정책·사업이 지역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평가, 지방우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「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」 도입
- \* 다양한 정책·사업(행.재정, 산업.일자리, 지역개발, 생활SOC 등)의 예상효과를 종합적·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지표 개발
- 균형성장기대효과를 측정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의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지방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 마련
- (예산 사전 조정권 강화) 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 사전 조정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
- 지특회계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국가균형성장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 예산 사전 조정권 강화
- \* (현행)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·배분하여야 한다.
- (개정안)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○ (포괄보조 확대) 지특회계 포괄보조 확대\* 및 5극3특 권역별 초광역발전계획 수립 예산 지원('26년 50억원)

\* (규모) '25년 3.8조원 → '26년 10.6조, 사업수 '25년 47개 → '26년 121개

- 기존 중앙정부 중심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 방식을 5극3특 권역 중심의 지역 맞춤형 정책·사업으로 전환, 사업추진 자율성 증대
- 소규모 보조사업 中 공모로 운영중인 중소기업(총사업비 100억 미만) 보조사업을 포괄보조로 이관하여 지자체 자율성 강화
- 초광역특별계정을 포함한 지특회계 총 규모를 '26~'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

○ (지방교부세율 상향 등) 5극 3특 균형성장, 복지지출 확대 등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'06년 이후 19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(現 19.24%) 단계적 상향 검토

- 국세-지방세 비율 7:3까지 개선을 목표로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검토

\* 현재 국세-지방세 비율 75:25 수준,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('05년 56.2% → '15년 50.6% → '25년 48.6%)

## ② 5극3특 지원 재정체계 구축

○ (초광역특별계정 신설) 종전 시·도단위 사업예산 지원 방식에서 시·도를 연계·통합하는 권역 단위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

- 현행 지특회계(자율계정+지원계정) → "자율계정+지원계정+초광역특별계정" 체계로 변경

편성방식		계정	지역자율계정	지역지원계정		초광역계정
지자체 자율 편성	시·도		시·도 자율편성사업	-	+	-
	시·군·구		시·군·구 자율편성사업	-		
부처직접 편성			-	부처직접 편성사업		

- 초광역특별계정의 재원확보, 사업추진 방식 등은 5극3특 지원의 효과성 제고 관점에서 검토

### [③ 성과연동을 위한 평가 시스템 구축]

- (성과연동) 5급3특 권역별 성과실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부여, 성과책임 확보 방안 강구
  - \* 5급3특 균형성장 사업 우수 지자체·공직자에 대한 포상 등 규정 마련
- (평가 시스템 구축) 기존 지특회계 사업 점검·평가시스템과 별도의 5급3특 권역별 사업에 대한 점검·평가 시스템을 구축
  - 5급3특 권역별 우수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모델로 타 권역으로 전파, 우수 권역 및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### [④ 지방우대 재정지원]

- 지역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 우대 방안 강구
  - ①'26년 예산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 
②지역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객관적 지표개발을 병행하여 제도화
- 지역별 차등지원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지표 마련
  - 차등지원 기준 마련 및 차등지원 방안 수립(행안, 산업, 기재부)
  - \* 지방위는 기존 균형발전지수를 개선한 「新 균형성장지수」 개발 제공
- ❶ (재정지원) 아동수당 등 7개 사업\*에 대해 지역을 3단계(특별·우대·일반 등)로 구분하여 지원금 인상, 자부담률 인하 등 차등 지원('26년~)
  - \* 아동수당, 노인일자리,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(비수도권유형), 국민내일배움카드(특별훈련수당), 지역사랑상품권, 창업사업화 지원,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
- ❷ (세제지원)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·소득세 감면 기간을 이전하는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7~12년 → 8~15년으로 확대(~25년말 조특법 개정)